

##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10대 정책

1

정치개혁1: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,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

2

정치개혁2: 권력의 사유화 막고,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

3

정부개혁: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,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

4

사회개혁1: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

5

사회개혁2: 질병예방통제청(가칭),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

6

복지개혁: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

7

경제개혁: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

8

노동개혁:

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

9

교육개혁:

대학입시 정시를 70%로 확대하고, 특목고-자사고-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

10

국방개혁:

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,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1	정치개혁1: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,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정치
<p>○ 목 표</p> <p>1.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‘일하는 정치’ 실현</p> <p>2. 정당법 개정하여 정당운영 및 활동의 투명성 확보</p> <p>3. 국회법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‘일하는 국회’ 견인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상임위,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 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최</li> <li>행정부에 대한 상시견제와 국회의 예측가능성 높여 효율적인 국정수행 추진</li> </ul> <p>2.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하겠습니다</p> <p>3.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안소위나 예산결산소위 등에서 차관, 실국장 및 과장 등과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 도출 추진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</li> </ul> <p>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무이므로 상설화 추진</li> </ul> <p>5.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진화법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만 한정</li> </ul> <p>6.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년 년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△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, △입법추진 및 통과실적, △예산결산 심사실적, 그리고 △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</li> </ul>			

○ 이행기간

- 법 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○ 재원조달 방안

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2	정치개혁2: 권력의 사유화 막고,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정치
<p>○ 목 표</p> <p>1.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국정농단을 차단하고 권력의 민주적 통제 추진</p> <p>2. 공수처법 개정,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 확보 및 경찰 개혁 추진</p> <p>3. 정치검찰·정치법관 퇴출,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차단하여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공수처법 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여 공수처의 권한남용 방지</li> <li>-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</li> <li>-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하여 대통령 영향력 차단</li> </ul> <p>2. 검경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진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</li> <li>-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</li> <li>- 정보경찰 폐지 ·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</li> <li>-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</li> </ul> <p>3.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 특검수사 추진</li> </ul> <p>4. 정치검찰 · 법관 퇴출시키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사기관 장 임명 시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, 국회 동의 절차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</li> <li>-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</li> </ul> <p>5.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 3배 상향하여 엄벌하고 뿌리를 뽑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차단</li> </ul> <p>6.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하겠습니다</p>			

- 민주주의를 유린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추진
-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 방해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권력남용 책임 추궁

#### 7. 드루킹 방지법과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

- 매크로 등 불법기제로 여론조작행위를 지시·유도·실행 등에 가담한 경우 강력처벌
-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 국고환수 조치 및 이익의 10배 벌금형
- 여론조사법에 불법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전화번호와 중복샘플 사용금지
- 외국인이 댓글 알바에 관여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

#### 8. 국민주권을 보호할 투개표과정을 관리할 투명선거법 추진하겠습니다

- 관외사전투표(부재자투표, 선상투표, 재외자투표)보관함 관리, 감독 강화.
- 투표함(보관함) 밀봉, 모든 이동시 경찰 호위, CCTV 촬영 의무화
-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와 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촬영 의무화

#### 9.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하여 국민의 민의왜곡을 막겠습니다

- 외국인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

#### ○ 이행기간

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#### ○ 재원조달 방안

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3	정부개혁: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,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정부
<p>○ 목 표</p> <p>1.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정부기능과 업무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</p> <p>2.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면적인 혁신 및 구조조정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</p> <p>3.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정부로의 대전환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사회부총리 폐지하고 산업부총리 신설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차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에 관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</li> <li>-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</li> </ul> <p>2. 정부의 비효율적인 유사·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 업무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부처 개편, 각종 위원회 정비, 교육훈련기관 통폐합</li> </ul> <p>3. 미래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공무원을 감축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구축하여 2030년까지 공무원 20% 감축</li> <li>-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, 총액인건비제 개정, 개방형 임용제 확대</li> </ul> <p>4.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경영 진단 통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과 민영화,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</li> <li>- 공공기관 인력 감축,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</li> </ul> <p>5. 국가부채를 감축하고 정부 효율화 추진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부채 감축 선언 및 이행계획 확보</li> <li>- 공무원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, 기금 통폐합 및 정비 통한 기금운영제도 개선</li> <li>- 서비스공급 및 시설관리·전산업무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외부위탁 등</li> </ul>			

**6. 공무원·군인·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하여 국민통합 구현하겠습니다**

-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 240만원,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인데,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 2조2천억원, 군인연금 1조7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차단
- 일본은 2015년부터 공무원과 국민연금 급여 동일액수로 통합, 미국의 1980년대부터 신규 연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제도 벤치마킹
- 1단계 일본식 공동연금→ 2단계 미국연방공무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합
- 공적연금통합일원화법 제정하고, 국민연금하나로 추진위원회 설치  
( \* 신규 임용공무원부터 적용)

**○ 이행기간**

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**○ 재원조달 방안**

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
-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2조2천억원, 군인연금 1조7천억원 혈세낭비 차단효과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4	사회개혁1: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사회
<p>○ 목 표</p> <p>1. 공정한 사회(상식이 통하는 사회,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,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) 구현</p> <p>2. 로스쿨/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</p> <p>3.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, 열정페이 근절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/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겠습니다</p> <p>2.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</li> <li>- 채용서류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처벌</li> </ul> <p>3.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기준법 개정하여, 기능이나 경험습득 청년들 보호조치와 열정페이 강력처벌 조항 신설</li> </ul> <p>4.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 척결</li> </ul> <p>5. 국회에 ‘불공정 신고센터’ 설치 및 ‘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진 자, 힘 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,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 사례 척결</li> <li>-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,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</li> </ul>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</li> </ul> <p>○ 재원조달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</li> </ul>			

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5	사회개혁2: 질병예방통제청(가칭),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	정책분야	사회/안전
<p>○ 목 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 대응하는 질병예방통제청(가칭)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상 대응</li> <li>2. 과기부 등 관련부처-대학-연구기관-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치료제 개발</li> <li>3.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,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</li> <li>4. 아동청소년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</li> </ol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(가칭)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습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, 감염병 발생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</li> <li>-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, 감염지역 통제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결정</li> <li>- 질병예방통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 보유, 역학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 확립</li> <li>- 전염병방지법 만들어 유증상자 공항, 항만에서의 격리조치, 자가격리와 돌봄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li>2. 관련부처-대학-연구기관-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학기술부·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 총집중 치료제 개발</li> <li>- 바이오시밀러 강국 넘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</li> </ul> </li> <li>3.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/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, 일용직,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 직접 지급</li> <li>- 간이과세 기준선 연 1억원으로 올리고,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는 부가세 면세</li> </ul> </li> <li>4.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,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하겠습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oT형 측정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실시간 대응</li> <li>-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</li> <li>- 대형쇼핑몰,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미세먼지 감축 유도</li> </ul> </li> </ol>			

#### 5.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

-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
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, 집행유예, 가석방 금지
-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
- 한국형 '스위티 프로젝트'법 추진하여 성범죄 함정·유도수사 허용
-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

#### 6.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하겠습니다

-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·유통·소지 강력 처벌
-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·차단
-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
-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

#### 7.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하겠습니다

-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및 데이트 폭력, 신체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 통제·조정도 폭력에 포함
-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, 전화, SNS 등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
-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
- 피해자 주거지원, 생계비, 의료비,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
-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·관찰·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
#### 8. 스토크방지법 추진하겠습니다

- 스토크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속 처리
- 미성년자 스토킹, 무기소지, 반복행위에 대해 가중처벌
- 상습스토크 징역형

### ○ 이행기간

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### ○ 재원조달 방안

-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활용과 추경예산의 효율적 사용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6	복지개혁: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	정책분야	경제/복지
<p>○ 목 표</p> <p>1.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</p> <p>2.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무료 제공, 아이를 돌보는 유급돌봄휴가제 도입</p> <p>3. 국공립어린이집 50%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(공공임대주택)을 제공할 예정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 주상복합형 “메트로 하우스” 추진</li> <li>- 상업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낮춰, 주변시세 50% 수준의 저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</li> <li>- 저층에 청년 위한 창업혁신공간, 문화예술공간 등 청년 전용 다목적 복합공간 배치</li> <li>- 광역시 이상 주택건설 용적률 상향, 자녀 있는 청년부부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 제공</li> </ul> <p>2. 출산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혼부부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주택 평수를 달리하여 제공 ex) 혼인 후에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부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 선착순, 우선적 지원</li> <li>- 임신부 진단검사비,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(60만원→ 100만원) 상향</li> <li>-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·문화·체육·관광·편의시설 등 할인혜택을 담은 ‘다둥이 문화패스’ 신설,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다양한 혜택 추가</li> </ul> <p>3. 유급돌봄휴가제 도입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육아휴직제도 12개월 의무화(남녀),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</li> <li>- 유아 부모는 4시간, 6시간 등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대,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 지급</li> <li>- 한 달 이내 유급돌봄휴가제 보장 통해 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</li> <li>-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휴직 허용으로 경력 단절 해소</li> </ul> <p>4.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공립유치원 확대,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,</li> <li>-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</li> </ul>			

-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,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 가능토록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
- 가정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별도지원 확대

#### ○ 이행기간

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#### ○ 재원조달 방안

- 메트로하우징 재원은 3.7조 + 공공리츠공공리츠(REITs) 통해 조달, 임대보증금 통해 추가로 확보
-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7	경제개혁: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	정책분야	경제
<p>○ 목 표</p> <p>1.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고, 4차산업혁명 첨단·융복합 기술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</p> <p>2.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하고,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</p> <p>3. 주52시간제 획일적 적용의 부작용 극복하고,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재조정</p> <p>4.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</p> <p>5. 한국형 벤처 밸리를 구성해 AI,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</li> <li>- 최저임금은 소상공업-중소기업 업종 특성, 숙련도 특성,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</li> <li>- 주52시간제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, 주/월 단위 근로시간 조정, 유연근로제 정착 (R&amp;D업종 유연한 근로시간제 신설,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,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)</li> </ul> <p>2.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및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하고, 젠트리피케이션 방지</li> <li>-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활성화</li> </ul> <p>3. 미국, 일본, 프랑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도 현행 5종에서 26종 까지 재확대</li> <li>- R&amp;D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신설</li> <li>-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, 재량근로제 자율성 강화,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</li> </ul> <p>4.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</li> </ul>			

- 규제비용 총량제,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
- 모험투자를 담당하는 혁신자본 확대, 벤처캐피털 규모 획기적으로 보강
-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(신상품 개발, 신시장 개척, 마케팅 지원 강화)
-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모색

#### 5.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·융복합 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하겠습니다

- AI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첨단·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
- 바이오 혁신 활성화, 바이오산업과 식품 및 농수산업을 연계 육성
- 지식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경제(data economy) 구현
-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

#### 6.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, 4세대원전(SFR, 소듐고속중식로)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

##### ○ 이행기간

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

##### ○ 재원조달 방안

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
-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8	노동개혁: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	정책분야	노동
<p>○ 목 표</p> <p>1.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</p> <p>2. 강성노조의 불법파업과 악덕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</p> <p>3. 노조법 일부 조항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제약하고 있어,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해 노사관계 선진화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,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·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</p> <p>2.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,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,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다</p> <p>3.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, 선택적근로시간제도,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</p> <p>4.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및 부양가족급여 신설</li> <li>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와 사업주 및 경영진 의무 강화</li> </ul>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·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</li> </ul> <p>○ 재원조달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.</li> </ul>			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9	교육개혁: 대학입시 정시를 70%로 확대하고, 특목고-자사고-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사회
<p>○ 목 표</p> <p>1. 조국사태의 ‘아빠 찬스, 엄마 찬스’ 대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로 개혁</p> <p>2. 자사고, 외고, 국제고, 특목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공교육 강화</p> <p>3.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직업인 양성 위한 최첨단 직업학교 설치 확대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%로 바로 잡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입시 전체 모집의 70%대 수시비중을 30%수준으로 하향 추진</li> <li>-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(7월과 10월) 시행하여 응시기회 확대</li> </ul> <p>2.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, 자사고, 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</li> <li>- 초/중/고 공교육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</li> <li>-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장으로 온라인(Online) 강의를 보편화할 수 있는 여건 구축</li> </ul> <p>3.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의교육으로 역량을 키우고 4차산업 혁신을 위한 발판 마련</li> <li>-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국민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인재들로 양성</li> <li>- 1년에 10만 명씩, 10년간 100만 명 인재 양성</li> </ul>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•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</li> </ul> <p>○ 재원조달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률개정 및 정책입안 사항으로 재원조달 사항 아님</li> <li>-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</li> </ul>			

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국민의당		
정책순위: 10	국방개혁: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,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	정책분야	외교안보
<p>○ 목 표</p> <p>1.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</p> <p>2. 저출산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위해 전문부사관제 확대</p> <p>3. 전역장병들의 창업·취업·학업을 위한 사회진출 장려금 2천만원 지급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</li> <li>- 맞춤형 억제전략(킬체인, KAMD, KMPR)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</li> <li>-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과학군 육성</li> </ul> <p>2.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%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간부 비율을 조정하며, 정예간부의 정년(부사관58세/ 소령 55세/ 중령 58세/ 대령 60세)은 연장하여 직업전문군대로 혁신</li> <li>-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(1,2학년 공통/ 3,4학년 육.해.공 전문과정)하고,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전 교육을 양성과정에 도입</li> </ul> <p>3. 전역장병들의 창업·취업·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스라엘 탈피오프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-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, 취업,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지급.</li> <li>* 사회진출장려금: 산출근거 : 2천만원 * 20만명(18개월 기준)= 연간 4조원</li> <li>-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유공자수당 현실화 등 국가책임형 보훈 강화</li> </ul>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●개정 사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 및 완료</li> </ul> <p>○ 재원조달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부비율 조정 및 병력 감소분 등 자체 사업 재조정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 추진</li> <li>-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으로 조달</li> </ul>			